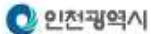
	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인천광역시	
		배포일자	2021년 2월 22일(월) 총 5매		
담당 부서	토지정보과	담당자	• 지적팀장 최민식 ☎440-4571 • 담당자 이한담 ☎440-4572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로 토지개발사업 활성화
- 24개 대규모 토지개발사업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통해 문제점 해소 -
- 사업기간 단축으로 토지개발사업 활성화, 시민 재산권 보호 -

- 앞으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문제점이 사전 해소돼 개발사업 활성화와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월 중순부터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지적확정측량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15개,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9개 등 24개의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지적공부(토지대장, 지적도)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이다.
- 인천시는 지난해 20여 개 지구 3,000천여㎡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.

-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반드시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. 간혹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 및 재시공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또는 정확한 토지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.
-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. 이 제도는 지적확정측량 대상지구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시행자 또는 측량수행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업지구 현장 방문,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경계 침범, 재시공, 계획 변경 등 공사 준공시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.
- 사전검토제는 시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과 군·구 지적 소관청에서도 같이 운영된다. 구(區) 지역의 경우 면적 1만㎡ 이하는 구에서 담당하고, 1만㎡ 초과는 시 또는 경제청에서 담당한다. 군(郡) 지역의 경우는 면적 3만㎡ 이하는 군에서 담당하고, 3만㎡ 초과는 시에서 담당한다.
- 사전검토제가 시행되면 지적확정측량 시 예견되는 문제점이 사전에 해소돼 사업기간이 단축됨으로써 토지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. 또한, 확정측량 성과검사와 지적경계 등록이 신속·정확하게 이뤄져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-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“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정확한 사업지구 지적경계를 확정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, 시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 참고 >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추진 계획 및 대상사업

< 붙임 > 관련사진

지적확정경계 사전검토로 토지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
「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」 추진 계획

- ❖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시 예견되는 경계침범, 재시공, 계획변경 등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여
- ❖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함은 물론 신속·정확한 지적경계 등록을 통한 시민재산권 보호

□ 현황 및 문제점

지적확정측량 경계는 반드시 공사 완료된 현황(현장 시공선)과 일치하여야 함.
- 도시계획선·사업계획도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, 각종 계획 변경 또는 재시공
(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제5항)

- 정확한 토지경계 고려 없이 사업시행으로 경계분쟁 민원 발생
- 부정확한 경계시공으로 사업계획 변경, 재시공 등 사업기간 연장
- 인접토지 점용·훼손 등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비용 발생

□ 추진개요

- (추진방향)
 - 인·허가 단계부터 효율적인 사업추진 지원 및 문제점 사전차단
 - 정확한 사업지구 지적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
- (추진대상) 24개분야(대규모 토지개발사업)
- (운영기관) 시, 경제청, 군·구(지적소관청)
- (추진내용)
 - 지적확정측량 문제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
 - 경계침범·재시공·계획변경 등 예방 사전컨설팅 추진

□ 기대효과

- 경계분쟁 민원 해소 및 기간 단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비용 절감
- 사업지구의 정확한 지적경계 확정·등록으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

「지적확정측량」 대상 사업

□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대상사업

1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
2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

□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

1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
2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사업
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
4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사업
5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개발사업
6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
7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
8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매립사업
9. 「항만법」 및 「신항만건설촉진법」에 따른 항만개발사업
10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
11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물류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
12. 「철도건설법」에 따른 고속철도,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
13. 「도로법」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

□ 토지면적 10,000m²이상 토지개발사업[국토교통부장관 고시(2014.7.31.)]

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원시설사업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계획사업
3.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
4. 「전원개발촉진법」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
5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
6.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
7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개발사업
8. 「수도법」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
9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 학교시설사업

< 지적확정측량 사진 >

